



「밀양시 배드민턴전용구장 건립공사」 조감도

목 차

■ 건설관련 소식 1

- 경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를 위한 도민 감시기능 강화
- 마산합포구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돼 활력 기대
- 청렴도 향상을 위한 건설공사 품질시험 접수처 변경 및 홈페이지 개편
- 남부내륙철도 조기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건축물도 건강검진이 필요해요!
- 경남도, '거제 300만 원대 아파트건립' 용도지역 변경 의결
- 경남도, 소하천정비사업 전국 최우수
- 경남도, 거제 옥포항 친수시설 조성공사 시행
- 경남도, '하동항' 기재부 예타 사업으로 선정
- 경남도, 농촌용수개발사업 국비 568억 원 확보
- 거창위천생태하천 친수공간 조성 막바지
- 배드민턴전용구장 건립공사 시행
- 총사업비 320억 소요... 인근주민 민원해결 및 쾌적한 환경조성
- 지역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조성기반 마련
- 주차장, 편의시설 확충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기대

■ 지식정보 12

- 도, 미래부 지역특화맞춤형 기술이전 공모사업 선정
- 경남도, 산간·도서벽지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귀 열고 눈 뜬다'
- 경남도,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개선 사업 본격 추진
- 진해 옹동 글로벌 테마파크 투자단 경남도 방문
- 道, 신재생에너지 마을단위 주택지원사업 최종 확정
- 해외건설 新시장 진출, 정부지원과 함께 출발
- 국토부, 지자체 건축인허가 불만민원 바로잡기
- 빗물을 가두어 두는 도시매뉴얼 나왔다
- 국토부, 숨은 지역 건축규제 발굴하여... 상시 정비·관리하기로
-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본격화
- 세계 최초 비정형 거푸집으로 다양한 형태의 초고층 빌딩 짓는다

■ 해외건설이야기 22

■ 입법예고 및 법령해석 25

■ 신기술 정보 30

■ 건설기술심의 현황 31

■ 계약심사 현황 32

■ 기술인 나눔 정보 33

경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를 위한 도민 감시기능 강화

▶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경상남도는 2009. 8. 13. 제정된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의 제정 취지
에 맞게 도내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 및 품
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
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4. 24일부터 15일
간(4.24 ~ 5.14) 입법예고 중에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민 감시기능 강화
를 위해 당초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건설공
사의 범위인 도금액 50억 원 이상을 총공사
비 10억 원 이상(사업비중 용지비와 보상비
제외)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관계부
서 협의,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등 개정절차
를 거쳐 '14년 7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언론매체
및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예
정이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도 실국
홈페이지(건설지원과) (www.gsnd.net) 및 건
설정보(www.gnci.gsnd.net) 홈페이지에서 확
인할 수 있다.

도 강병철 건설지원과장은 “앞으로 건설공
사부분에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품질확
보는 물론 건실시공 의무를 정착시켜 안전사
고예방과 경남도의 건설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팀장
(055)211-4326

경남도, 마산합포구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돼 활력 기대

- ▶ 국토부 28일 발표... 전국 86개소 중 마산
합포구 포함 13곳 지정
- ▶ 舊마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경남 미래 50년” 기반 마련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주변지
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도시재생 선도시
역'으로 창원 마산합포구를 포함하여 13곳을
지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전국에서 86개소
가 참여했으며 최종 13개소가 지정되는 등 지
자체간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경남도는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민참여
형 도시재생'의 선도사업으로 舊마산 원도심
지역이 지정됨에 따라 사업비 200억 원 규모
로 부림시장, 창동예술촌 중심의 문화예술 중
심 도시로 새롭게 변모하게 될 것이라라고 밝
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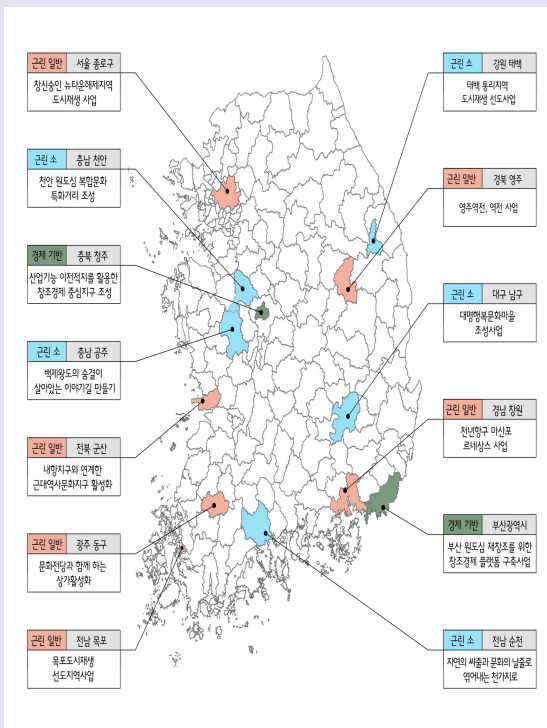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이 사업으로 쇠퇴한 지역 도심을 살리고 생활
여건이 열악한 노후·불량주거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전체 사업비 중 50%에 해당하는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세부사업을 보면 부림도시공원 및 공영주차
장 조성, 임항선 추억을 예술로(路) 프로젝트,
불종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천년항구 마산
포 종합안내정보시스템 구축 등 10개 사업으
로, 올해부터 4년간 지원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그동안 이번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해 홍준표 도지사가 마산합포구 창
동·오동동 일대를 찾아 도시재생에 대한 강력
한 의지를 보였으며,

또 '마산 재생프로젝트'를 '경남미래 50년' 전략계획으로 선정하는 등 舊마산 원도심 개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한편, 경남도 허동식 도시계획과장은 “마산 재생 프로젝트의 선도사업을 통해 인근 어시장 등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마산 원도심 부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 선정지역 현황도>

■ 자료 : 도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055)211-4326



청렴도 향상을 위한 건설공사 품질시험 접수처 변경 및 홈페이지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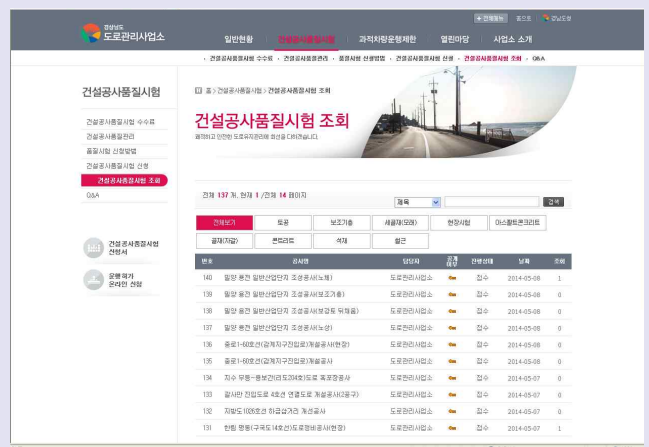
경남도는 지난 4월 1일부터 청렴도 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시험실 접수처를 당초 시험실에서 관리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원인과 시험자 간의 접촉을 사

전에 차단하여 청탁 등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건설공사 품질시험의 공정성 및 투명성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금번 5월 1일부터는 품질시험의뢰 신청서 온라인 접수를 실시하고, 민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품질시험 처리과정(접수≫완료) 및 성과표를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다.



경남도는 추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홍보를 통해 전국 품질시험성과 1위에 버금가는 청렴한 품질시험 운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 홈페이지(<http://street.gsnd.net>)를 통해 확인가능 하다.

■ 자료 : 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안전과
도로품질담당
(055)254-4233



남부내륙철도 조기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7일 오후 2시 진주시청 시민홀, 남부내륙철도는 경남 발전의 핵심



지난해 11월 19일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에서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남부내륙철도는 정부에서 2011년도부터 10년간의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후반기(2016년~2020년)에 예정된 사업으로, 경남도는 이를 전반기(2011년~ 2015년)에 조기 착수토록 그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다.

이와 관련해 7일 오후 2시 진주시청 시민홀에서는 경남발전연구원 주관으로 남부내륙철도 조기 구축과 성공적인 추진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에는 홍준표 도지사, 김영표 경남발전연구원 부원장, 관내 유관기관 관계자 및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하였고,

이날 홍준표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남부내륙철도는 도의 역점시책 사업으로 서부경남은 물론 경남 발전을 위한 비상의 날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남부내륙철도의 위상정립 및 사업 추진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후, 김경환 경상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연규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강승필 서울대 교수, 황인식 한가람이엔지 박사, 김진수 서부경남발전협의회장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난 3월 정부가 진주·사천 항공산단, 밀양 나노융합 산단, 거제해양플랜트산단 등 3개 특화산단이 지정돼 경남의 엄청난 발전가능성을 예고했다”며, “남부내륙철도는 향후 경남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업으로 작용해 서·남부권의 균형발전과 남해안 관광활성화는 물론, 원활한 물류수송으로 남부내륙 산업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남부내륙철도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6조 7907억 원이 소요되고, 김천에서 거제까지 186.3km인 남부내륙철도가 완료되면, 서울~진주간 소요시간이 2시간 10분으로 기존 3시간 30분에 비해 1시간 20분이나 단축된다.

■ 자료 : 도 교통정책과 공항철도담당
(055)211-4493
경남발전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
(055)239-0194

건축물도 건강검진이 필요해요!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건축물 7월 19일까지 정기점검 받아야

경남도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2012.7.19.)에 따라 건축물의 기능 유지 및 수명연장을 위해 2년마다 건축물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오는 7월 19일까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20년 이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일 1994. 7. 18.(포함) 이전 건축물로서 점검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 **연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집합건축물**
*주택법에 의한 관리주체 관리 공동주택은 제외
- **지자체 건축조례로 정한 다중이용업**
*일정면적 이상의 음식점, 제과점, 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방, 학원, 목욕장, PC방,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실내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

점검기간은 4월 19일부터 7월 19일까지이며 소유주(관리자)가 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 건축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점검업체 목록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세움터 홈페이지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 점검업체 목록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점검자에 대한 비용 또한 세움터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개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점검비용은 연면적, 건축물의 건령,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점검내용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등을 점검하며 점검 후 점검결과는 점검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거나 소유자(관리자)가 직접 시·군·구청에 제출할 수 있다.

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며 건축행위(증축, 용도변경 등)에 제한이 있으며, 과태료 또한 부과된다.

그러나 이번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없고 유지·관리가 우수한 경우에는 다음 1회 정기점검이 면제되는 혜택도 마련되어 있다.

경남도내 20년 이상 점검대상 건축물은 1,623동(조례대상 건축물 제외)으로 4월 19일까지 점검대상 건축물은 소유자(관리자)에게 점검대상임을 통보하고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가 건축물의 기능, 성능, 안전성 회복·향상을 위해 반드시 건축물 정기점검을 받도록 당부했으며, 이를 위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자료 : 도 건축과 친환경건축담당
(055)211-4422

경남도, '거제 300만 원대 아파트건립' 용도지역 변경 의결

▶ 도, 도시계획위원회 수정의결로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 기반 마련

경남도는 지난 18일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거제시에서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을 위해 신청한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심의안'을 서민임대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변경을 수정·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의결로 거제시 양정, 문동지구 농림지역 6만 4천㎡와 미세분 관리지역 6천㎡ 가 계획관리지역 7만㎡로 용도변경 되었다.

이날 안건은 거제시에서 난개발 방지와 특혜성 해소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구역 중 표고가 높은 지역 일부를 축소 조정하고, 농림지역 중 서민임대아파트 건립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 '2014. 3. 5. 재 입안 주민공람공고'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건이었다.

이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표고가 높은 지역을 추가 제척하여 수정·의결하면서, 조건사항으로 초등학교 부지는 계획부지에서 1km이내로 확보할 것과 권고사항으로는 친환경적 개발을 제시했다.

이후 거제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행정절차와 주택사업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며, 향후 '거제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이 완료되면 서민들에 대한 주거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자료 : 도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055)211-4324



경남도, 소화천정비사업 전국 최우수

▶ 경남도, 소화천정비사업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경남도는 정부가 주관한 2013년도 소화천 정비사업 종합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2012년에 이어 2013년, 2014년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쾌거로 경남도가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관계 공무원들의 숨은 노력의 결과로 이뤄낸 성과로 판단된다.

기초자치단체로는 고성군이 우수, 거창군이 장려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다가오는 5월 26일 제21회 방재의 날 행사시 우수기관 및 유공자가 포상을 받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2013년도 시행한 전국의 128개 시·군 358개소 사업장 중 정비 실적이 우수한 각 시·도별 우수 시·군 21개소의 사업장을 추천 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지난 3월 10일부터 4일간 현장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점검하여 평가했다.

한편, '아름다운 소화천 가꾸기 전국 공모전' 심사에서는 2011년 함양군 목현천 최우수, 2012년 양산시 원동천 우수, 지난해는 거제시 교항천이 우수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로 국비 80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은 바 있다.

올해에는 5~6월에 아름다운소화천 가꾸기 공모전이 개최되며, 2015년에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 자료 : 도 치수방재과 하천관리담당 (055)211-3944



경남도, 거제 옥포항 친수시설 조성공사 시행

▶ 오는 5월 중 착공, 친수시설 및 문화공간 조성

경남도는 기존 항만 기능이 상실된 거제 옥포항을 친수공간으로 재탄생될 것이라고 밝혔다.

거제 옥포항 친수시설 조성공사는 오는 5월

중으로 착공할 예정이며, 2015년 완공을 목표로 도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공사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총 50억 원이 투입돼 친수호안 129m, 잔교식 친수데크 30m, 친수공간 3,900㎡를 조성하게 된다.



옥포항은 2012년 12월 거가대교 개통으로 부산 ~ 옥포 항로를 운항하는 연안여객 운송 실적의 현저한 감소로 여객선터미널 및 여객항로가 폐쇄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 변동으로 항만의 새로운 기능 전환이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옥포항을 옥포조선소 지원항만으로서 선박 건조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 시설 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제공과 항만이미지 개선을 위한 친수시설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경남도 관계자는 “기존 여객부두 전면에 친수시설 및 문화공간, 주차장을 조성해 주변지역 주민과 항만 이용자에게 다목적 해양친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항만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료 : 도 항만물류과 항만개발팀당 (055)211-3972



경남도, '하동항' 기재부 예타 사업으로 선정

- ▶ 2020년까지 2만 톤급 화물부두 등 6개 사업 국비 1525억 원 투자
- ▶ 하동항 건설, 순항(順航)의 닻 올린다

경남도는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하동항' 건설이 11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의 '2014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하동항 건설은 갈사만조선산업단지 및 대송산업단지 등 인근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조선·해양플랜트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것으로 2020년까지 국비 152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화물부두 3선석, 예인선 등 항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부두 1선석, 각종 화물선의 입출항을 위한 항로 준설 및 확장, 진입도로, 갯벌 탐방로, 호안 등이 건설된다.



도는 그간 사업 선정을 위해 해양수산부, 하동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 등과 수차례 협의를 해왔으며, 지난해 12월에는 항만 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인 '항만기본계획'에 해당 사업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이후에도 도는 해양수산부, 하동군,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오며, 사업 선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경남도는 앞으로 하동항의 본격적인 건설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시작될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며 2015년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항만 개발에 착공해 2020년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하동항 건설이 하동 갈사만조선사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수출입 물류비 절감과 산업경쟁력 확보는 물론, 3406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1161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1623명 고용유발효과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 자료 : 도 항만물류과 항만정책담당 (055)211-3954



경남도, 농촌용수개발사업 국비 568억 원 확보!

▶ 순수 국비로 의령군 상신지구, 거창군 마리지구 용수원 개발

경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의령군 상신지구와 거창군 마리지구가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신규사업지구로 선정돼 국비 568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사업비는 10여 년 전의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산정된 것으로, 공사가 발주되면 그동안의 물가 상승분 등이 반영되어 최대 851억 원의 순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은 수혜면적 50ha 이상 지역에 저수지·양수장 등의 용수원을 개발해 농업용수를 확보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만드는 사업이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상습 가뭄과 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확보한 국비는 의령군 상신지구에 180ha 239억 원이 투입되며, 거창군 마리지구에 344ha에 329억 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방비 부담이 없는 순수 국비지원 사업을 적극 유치해 도 재정여건 개선은 물론,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살기 좋은 농촌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농업정책과 농업용수담당 (055)211-5253

거창위천생태하천 친수공간 조성 막바지

거창군은 국토교통부의 하천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거창위천생태하천조성사업을 총사업비 139억 원을 들여 2011년 12월에 공사착공해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친수 공간 조성목적으로, 송정교 하류 하천구역내의 농경지를 매입해 기존 콘크리트 용수로 철거하고 친환경적인 생태수로를 조성해 주변 주민이 쉴 수 있는 생태공원을 만들고 있다.

지난해 토지보상협의를 완료 후 10월부터 기존 콘크리트 용수로 철거를 시작으로 자연석을 활용한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한 친수 실개천 조성을 마치고 현재 주변 부대시설 설치중에 있으며 7월말 마무리를 예정으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주요 시설로 친수 실개천, 산책로, 연못, 경사 진입로, 친수 스텐드와 주민이 편히 쉴 수 있는 조경 식재가 포함돼 있다.



거창군은 금번 친수 실개천 생태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인근 산책로와 연계해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도심에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해 거창의 새로운 도심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료 : 거창군 건설과

배드민턴전용구장 건립공사 시행

▶ 배드민턴 메카도시에 걸맞는 배드민턴전용구장 건립공사 착공

밀양시는 배드민턴 메카도시의 명성을 잇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코자 밀양시 교통 1138번지 일원에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공사를 시행한다.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국비 72억 원, 도비 32억 원을 지원받게 되며, 시 자체예산 76억 원을 합쳐 총사업비 18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공사추진을 위하여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2012년 기본설계용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2013년 실시설계용역, 설계경제성 검토용역, 경상남도 도시디자인위원회 자문을 받았으며, 2014년 2월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용역을 거쳐 3월 밀양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으며, 4월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중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본 구장의 시설규모는 세계 배드민턴연맹(BWF)에서 제시하는 국제경기대회에 맞는 시설계획을 갖추고,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4,752.76㎡ 시설규모로 2,6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건립될 계획이며, 가변형 관람석을 활용하여 평상시는 20면, 국제경기 시에는 6면의 코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본 구장 공사 착공 전에 구장 건립지에 기 식재된 조경수를 이식하기 시기인 4월 중에 이식하기 위하여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지 조경수 이식공사'를 착공하였으며, 5월 중 조경수 이식을 마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배드민턴 메카도시로의 도약을 위하여 밀양시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사업인 만큼 본 사업이 완료되면, 밀양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축물의 탄생, 국제 및 국내 배드민턴 경기의 유치로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은 물론, 생활체육의 확산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지만, 배드민턴 전용구장의 공사로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던 공원부지가 일부 축소되는 만큼, 공원부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다소 예상된다며,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주변 공원과 어우러진 아름답고 실용적인 건축물로 완공하여 시민들에게 되돌려 드릴 계획이라며, 넓은 아량으로 지켜봐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료 : 밀양시 체육시설사업소
(055)359-6262



총사업비 320억 소요...인근주민 민원에걸 및 쾌적한 환경조성



진주시는 지난 1993년 준공된 진주공공하수처리설 1단계 시설에 대하여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올해부터 10억원의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시가지 전구간 하수관거정비사업(BTL)화로 인해 가정집이나 사무실 식당 등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우수를 분리 배출함으로써 분뇨 등이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유입됨에 따라 악취발생이 증가되고 하수처리장 인근 반경 1Km 이내에 약 5000세대 이상이 신도시와 학교 및 농산물도매시장 등 공공기관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악취의 발생원인 시설인 1단계 하수처리시설(11만톤/일)이 준공된지 20년이 경과되어 시설개량이 필요하고 미복개 오픈구조로 외부에 노출되어 동절기 수온저하로 하수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악취 발생원인 시설에 대하여 악취의 포집 및 탈취시설 등 친환경적인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요구되어 온 실정이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320억원으로 사업비의 50%는 국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지방비로 총당되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2016년 12월경 완공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약취저감시설(13,306㎡) 설치가 완료되면 기존 초전지구 아파트단지 와 학교, 농산물도매시장 등은 물론 초전지구 도시개발 및 경남도에서 추진중인 진주부흥 프로젝트사업과 연계되어 약취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또한 처리장 상부공간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친환경 이미지 제고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 : 진주시 하수관 (055)749-4766



지역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조성기반 마련

2012년 10월 23일 진주역의 가좌동 이전 이후 강남동 구)진주역의 활용방안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오는 8월 정도면 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진주시는 구)진주역 일원 151,000제곱미터의 폐철도 부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오는 8월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으로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을 골격으로 진주의 역사와 남강 유등축제 등 진주 이야기를 담은 '길'과 남문 산역과 일반성역 등의 폐역사를 지역융합형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또한, 기존 제조업과 벤처산업의 육성 지원으로 대학생, 주부 등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구)진주역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한다고 밝히고,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 시비 40억원을 확보하여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용도폐지 승인을 받았으며, 기획재정부와 최종 협의를 통해 오는 5월 중 편입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청에서 지식산업센터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광역시(부산,대구,광주) 3개소에 이어 추가 사업을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 발주 계획으로 2010년 공모 사업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는 진주시의 국비지원 대상 사업 선정에 귀추가 주목 된다.



시는 구)진주역사 개발계획 수립과 연계한 구도심 개발 및 친환경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되면 상대적 낙후 지역인 망경 지역의 도심재생을 이끌 수 있을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 자료 : 진주시 산단조성지원과 (055)749-5428

주차장, 편의시설 확충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기대

거제시는 고현종합시장 현대화 사업의 하나로 전통시장의 시설개선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기공식』을 3월 31일 오전 11시 고현동 소재 주차장 조성공사 현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조성공사는 고현동 106-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36억 원(국비 75억 원, 시비 61억 원)을 투입, 지하1층 지상5층 철골조 주차장으로 연면적 8,988㎡의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2~5층과 옥상은 주차장으로 모두 272대의 차량이 주차 가능하며 1층은 상업시설과 상인회 회의실, 엘리베이터, 수유실 등의 편의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하나인 주차장 설치사업 국비 75억 원을 확보하는데 타 시군에서는 5년 정도 소요되고 있지만 거제시에서는 2년 만에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토지소유자들을 끈질기게 설득해 부지를 매입하는 등 행정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공사 입찰과정에서도 최초 낙찰자가 회사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고현사거리에는 물품을 상·하역하는 차량과 시장을 보기 위해 정차하는 차량으로 보행자의 통행불편은 물론 유사시 소방차 진입방해로 인한 화재 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늘 있다.

이에 2014년 말에 주차장이 완공되면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주변 대형마트 진출, 고객 편의시설 부족으로 이용객으로부터 외면 받아오던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시장주변 노점상을 1층 근린생활시설에 입점시킬 경우 인도와 차도까지 점유하여 지금까지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보행자의 통행불편 등을 일거에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장주변 생활 환경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료 : 거제시 문화공보과
(055)639-3384

경남도, 미래부 지역특화맞춤형 기술이전 공모사업 선정

- ▶ 올해부터 3년간 11억 4천만 원 투자, 도내 중소기업 기술이전 지원
- ▶ 경남T/P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보유 기술, 기업 이전 본격 추진

경남도는 지난 21일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에 '지역특화맞춤형 기술이전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내에는 기술이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 Reg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가 없어 지역 대학, 전기연구원, 재료연구소 등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성과물이 기업에 이전되는 사례가 미미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경남도가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은 지역대학, 연구소 등의 유망기술을 이전받아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 공공 연구기관 등 이미 개발된 기술을 이전하여 중소기업의 R&D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고 기술개발 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다

도는 그동안 경남 T/P(경남테크노파크)를 주축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특허법인 남촌 등과 함께 민·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은 결과라고 말했다.

본 사업은 올해부터 3년간 국비 9억 원을 지원받아, 도비 2억 4천만 원 등 총 11억 4천만 원을 투자하여 경남T/P내 지역기술이전

센터 설립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R&D기술을 이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오는 4월말에 (재)경남테크노파크와 한국연구재단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이전을 본격 추진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경남도는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본 사업과 별도로 도비 6억 원을 확보하여 도내 산업과 관련된 기초·원천기술 R&D 기획과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 미래산업과장은 “그동안 도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중의 하나인 R&D 투자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덧붙여 “앞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이 실제 필요한 시제품 제작, 사업화, 마케팅 부분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 : 도 미래산업과 연구개발지원담당
(055)211-2763



경남도, 산간·도서벽지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귀 열고 눈 뜬다'

- ▶ 올해 13개 시·군 150여개 마을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경남도는 30일 농어촌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을 위해 경남도, 한국정보화진흥원, (주)KT 3자간 2014년도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인터넷 이용이 불가능한 50가구 미만의 마을에 전화, 방송, 인터넷을 하나의 회선으로 이용이 가능한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14개 시·도(서울, 광주, 대전 제외) 13,217개 마을이 구축되었으며, 경남은 1,666개 마을을 대상으로 지난해까지 1,360개 마을이 구축 완료했다.

올해 도는 13개 시·군 150여 개 마을을 대상으로 정부, 지자체, (주)KT가 1:1:2 비율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26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의 사업은 육지를 대상으로 구축사업을 시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섬마을도 사업 대상에 포함(16개 마을)되어 도서지역에서도 전화, 방송,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진윤생 경남도 정보통계담당관은 “농어촌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을 통해 낙후지역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료 : 도 정보통계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 (055)211-2553



경남도,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개선 사업 본격 추진

- ▶ 에너지관리공단, 중소기업과 업무협약(MOU) 체결, 5년간 110개 기업 대상 추진
- ▶ 에너지진단 비용이 전액, 기업별 시설개선 비용의 70%(최대 7백만원) 지원

경남도는 28일 오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홍준표 도지사와 김명록 에너지관리공단 경남지역본부장, 중소기업 대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개선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미만인 도내 중소기업 중 에너지 진단 기업 12개에 진단비용 전액과 시설개선 기업 12개에 개선비용의 70%(최대 700만 원)를 지원한다.

* toe(ton of oil equivalent) : 에너지 단위로 원유 1톤이 가진 에너지의 양

도는 지난해의 경우에도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4건의 개선을 통해 연간 800Toe의 에너지사용량과 5억 원 상당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한 바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총 5억 원을 연차별로 투입해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협약으로 도는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등 총괄적인 행·재정상의 지원을, 에너지관리공단 경남지역본부는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사업대상 중소기업은 에너지 진단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와 시설개선 사업 시행 등의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홍준표 도지사는 “이 사업을 계기로 ‘지속적인 에너지비용 절감, 기업경쟁력 제고, 지역경제발전’이라는 ‘선순환 중소기업 에너지절약 시스템’이 구축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고, 김명록 에너지관리공단 경남지역본부장은 “사업추진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는 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료 : 도 경제정책과 자원관리담당 (055)211-2646

진해 웅동 글로벌 테마파크 투자단 경남도 방문

- ▶ 11일 호주, 미국 테마파크 관계자 경남도 방문, 사업 예정지 개발현황 청취
- ▶ 헬기로 진해 웅동지구 글로벌 테마파크 현장 및 거제, 남해안 등 실사



호주의 최대 미디어 그룹 중의 하나인 빌리지 로드쇼(Village Roadshow)사와 미국의 전문 기술, 관리 컨설팅 그룹인 에이컴(AECOM)사 부사장단 일행이 2박 3일 일정으로 경남도를 방문했다.

이는 지난 2월 6일 20세기 폭스사의 경남도 방문에 이은 두 번째 투자사 방문이다.

경남도는 이번 방문 목적을 20세기 폭스사와 함께 진해 웅동 글로벌 테마파크의 공동 투자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경남도를 방문한 투자단은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와의 면담을 갖고, 사업예정지 개발 현황 청취와 함께 헬기로 글로벌 테마파크 현장과 거제, 남해안 등을 실사했다.

또 다음날에는 부산 국제크루즈 터미널과 BIFF(부산국제영화제)거리, 센텀시티 등 글로벌

테마파크 주변 인프라를 조사하고 오후 늦게 김해공항을 통해 출국하게 된다.

이번에 방문한 Village Roadshow사는 호주 최대의 테마파크 투자운영기업으로 시네마, 영화제작 및 배급, 라디오를 포함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이며, 미국의 AECOM사는 포춘지 선정 세계 322위 기업으로 건축, 설계, 엔지니어 등 전문 기업이다.

경남도 김기영 투자유치단장은 “미국의 20세기 폭스사와 오는 5월 8일경에 우리 도와 MOU를 체결키로 예정되어 있어 올 연말경에 타당성 조사 용역이 마무리되면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단의 방문이 더 이루어질 것이다”고 기대 했다.

▶ 자료 : 도 투자유치단 해외기업담당
(055)211-3143

道, 신재생에너지 마을단위 주택지원사업 최종 확정

- ▶ 에너지관리공단 평가결과 9개 시·군 14개 마을 293가구에 국비 9억 원 지원

경남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2014년도 신·재생에너지 마을단위 주택지원사업」이 에너지관리공단의 최종평가 결과 경남도가 신청한 9개 시·군 14개 마을 모두 100%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어 국비 9억 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신재생에너지 마을단위 주택지원사업은 9개 시·군 14개 마을에 국비 9억 원, 지방비 5억 원, 자부담 10억 원 등 총 24억 원인 투입된다. 이번 마을단위 주택지원사업은 태양열 320.28㎡을 설치하여 온수를 생산하고,

태양광 826.98kW을 설치하여 연간 1,123M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연간 이산화탄소 528.31톤을 저감하는 것으로 20년생 소나무 8,430여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으며 폭염 및 한파 시에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개별단위 주택지원사업에 총 29억 원 예산을 확보하여 올 2월부터 12월까지 도민 신청에 의해 예산범위 내에서 국비 50%, 지방비 10%, 자부담 40%를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시군 경제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올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표한 『201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에 의하면 2013년 경상남도 태양광주택 보급호수(2,576호)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이며, 지난해 태양광발전 보급용량은 총 6만 3,273 kW로 2012년(2만 2,255kW) 대비 3배 가량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면, “경남 일원이 전국대비 일사량이 우수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마을단위 주택지원사업(김해 주촌면 천곡리)>



<개별단위 주택지원사업(진주시 상대동)>

■ 자료 : 도 미래산업과 신재생에너지보급담당
(055)211-2794

해외건설 新시장 진출, 정부지원과 함께 출발

▶ 시장개척비용 최대 90%지원, 진출시장 및 공종 다변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진출시장 및 공종 다변화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업체들에 올해 시장개척자금 약 38억 원을 지원한다.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은 리스크 부담이 큰 해외 新시장개척비용을 지원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의 프로젝트를 발굴함으로써 시장을 다변화하려는 것으로, 업체의 타당성조사비용, 출장경비, 발주처 초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지원규모 및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기로 하였다.

- * (지원규모) 최대 2억 원 → 3억 원
- ** (지원비율) 중소기업 최대 80%→90%, 중견기업 최대 50%→80%

세부 지원내역(88개사, 78건 38억 원)을 살펴보면, 업체규모별로는 중소기업에 60건 25억 원, 중견기업에 18건 13억 원을 지원하고, 진출지역별로는 아시아에 43건 20억 원, 중동에 16건 6억 원, 중남미에 9건 7억 원, 아프리카에 8건 5억 원, 기타 2건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사업별로는 타당성조사에 21건 21억 원, 현지교섭 55건, 17억 원, 발주처 초청 2건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규모는 전년 1차 지원 24억 원에 비해 58%나 증가한 것으로, 그동안 해외건설 시장 진출에 목마름을 느끼던 건설업체들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타당성조사 98백만원/건으로 전년대비 23% 증가, 현지교섭 31백만원/건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하여 그동안 지원현실화를 바라던 업계 수요에 한발자국 다가섰다.

특히, 올해부터 타당성조사에 대해서는 현지에서의 교통량조사, 지반조사, 측량 등에 소요되는 “현지조사비”를 지원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시장개척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을 통해 앞으로 전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기술과 시공능력이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에 해외시장개척 지원업체로 선정된 업체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아직 우리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은 미개척국가에 우리나라 건설인의 위상과 능력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 자료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
(044)201-3527



국토부, 지자체 건축인허가 불만민원 바로잡기

▶ 법보다 강한 경직된 유권해석 규제… 국민불편 및 투자 등 위축

앞으로 국토부가 지자체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유권해석으로 인해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민원을 적극 해소해 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판단하는 유권해석이 사실상 건축법령과 조례 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기간이나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토교통부내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등으로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소지가 있는 건축민원에 대하여 심층 검토하여 해당기관에 올바른 유권해석 등 방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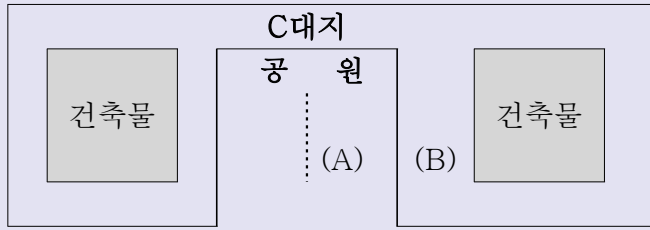
지난 4월 9일 첫번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출판·인쇄소도 발생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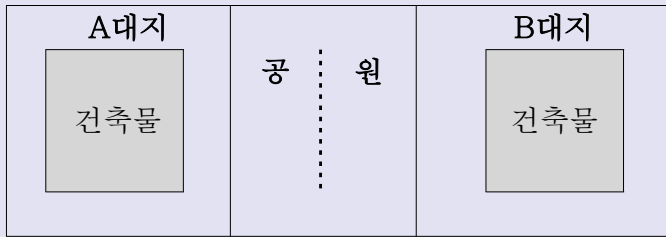
이에 따라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소외에도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김치제조업소 등의 제조시설도 제2종 근생으로 적용받게 된다.

② 하나의 대지가 공원으로 분리된 형태인 경우에도 채광을 위한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인 대지 경계선을 공원에 인접한 대지간의 중심선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일조 확보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하나의 대지가 공원으로 분리된 형태인 경우> :
인접대지경계선(B→A적용)



<대지와 다른대지 사이에 공원이 있는 경우> :
인접대지경계선(각 대지간 중심선)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런 불만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그간 사회와 건축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전임자의 기존 해석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책임소재 등을 의식한 편의적 소극적 회피성 답변 처리가 그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현장위주의 민원 검토를 위한 전문기구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설치하는 방안으로 「건축법」 개정 추진(국회 계류)중이며,

법률이 개정되어 시도 및 시·군·구에 정착되기 전까지는 국토부에서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시도, 대한건축사협회 및 국토부 민원중에서 검토가 필요한 민원을 적극 발굴하여 시대 착오적인 유권해석과 지자체 재량권 남용 소지 등을 적극 검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55

빗물을 가두어 두는 도시매뉴얼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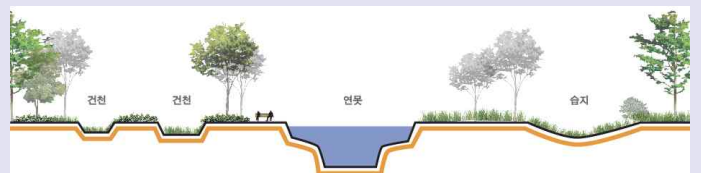
▶ 빗물저류공원 매뉴얼 제작·배포, 도로, 건물, 하천에도 활용 가능

국토교통부는 최근 급속한 기후변화에 의한 도시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재해저감형 저류공원 가이드북’을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자치단체에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하는 가이드북은 기존의 공원 지하에 대형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일반적인 집중식 관리방식 외에 다양한 공원 종류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여 설치 가능한 분산식 관리방식을 중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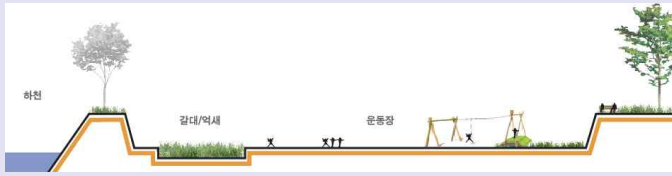
‘재해저감형 저류공원 가이드북’에서는 생태형, 운동시설형, 식생피복형, 지하매설형, 복합형의 5가지 유형의 도시공원 내 저류시설 모델을 제시하였다.

생태형은 연못 등 저류 능력이 있는 기존 자연지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산책로 및 벤치 등의 휴게시설 위주로 조성하는 자연형 공원에 적합한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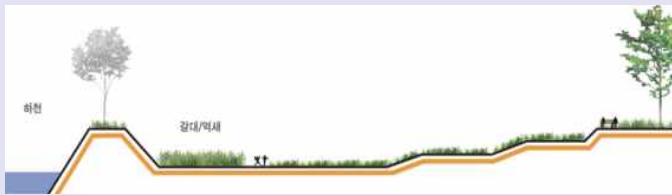
생태형 개념도

운동시설형은 저류가 가능한 지형을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운동시설, 편의시설(벤치 등) 등의 많은 시설이 설치하는 조성형 공원에 적합한 유형



운동시설형 개념도

식생피복형은 운동시설형과 같이 지형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나 별도의 시설 조성이 없이 단순히 식생을 피복하는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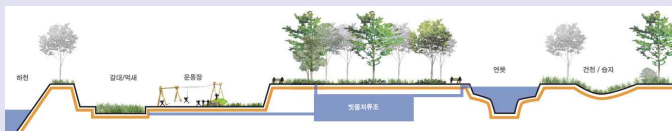
식생피복형 개념도

지하매설형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지형이 상기 3개 유형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저류 능력을 갖추는 유형



지하매설형 개념도

복합형은 상기 4개 유형 중 2개 이상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유형



복합형 개념도

또한, 공원형으로 제시한 5개 유형 외에 주택가, 녹지대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빗물저류 시설 12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 식생수로, 침투도랑, 식생여과대, 빗물정원, 옥상녹화, 유수지, 지하저류조, 인공습지, 투수성 포장, 보수성포장, 수변완충대, 빗물연못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재해저감형 저류공원 가이드북’ 배포를 통해 그 간 설계기준 등 기준없이 설치하고 있던 저류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저류 공원 및 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본 가이드북은 국토교통전자정보관(www.codil.or.kr)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재해저감형 저류공원 가이드북



■ 자료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52

국토부, 숨은 지역 건축규제 발굴하여... 상시 정비·관리하기로

▶ 「건축 임의규제·관행 신고센터」 운영, 규제 발굴 건축사 간담회 개최 등

앞으로 지자체가 법령에 근거없이 행정편의를 위해 시행중인 숨은 건축규제를 국토교통부가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지자체 건축 임의 규제를 조사하여 지난 2월까지 15건의 숨은 건축규제를 발굴하여 폐지*한 것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국민 불편을 주는 과도한 건축 임의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정비·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 다가구 주택 등 텃밭설치, 6미터 미만도로 건축후퇴 강제, 대지 조경설계지침

국토부에 따르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숨은 건축규제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민간투자를 위축시키고 있으나, 지자체의 소극적 행태 및 집행업무의 편의 등을 위해 임의지침이 잔존하고 지속 재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4월 30일부터 숨은 규제 발굴 및 관리를 위한 「건축 임의규제·관행 신고센터」를 대한건축사협회에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선 신고(신고센터 전화, 02-3415-6835)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홈페이지(www.kira.or.kr)를 통한 신고 외에도 별도의 인터넷 카페도 운영할 계획이며 규제를 신고한 건축사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원은 비공개로 보호될 것이므로 많은 규제개선 건의나 임의규제 신고를 당부하였다.

이번에 설치되는 신고센터는 건축현장의 일선에서 있는 건축사와 일반 국민들로부터

지자체 등의 임의 규제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아 폐지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에 통보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폐지를 추진하되, 안전강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는 법령 등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기존의 건축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등 건축현장의 애로사항과 지역별 불합리한 임의규제를 직접 발굴하기 위해 지난 4월 22일 부산권을 시작으로 5월 중순까지 전국 건축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도 계획 대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많은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숨은 건축 임의규제로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했던 문제점이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계 간담회를 통해 건축현장과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 숨은 규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신고센터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용	규제내용	지역 (지자체수)
· 텃밭설치 지침	· 텃밭설치의무(200㎡이상 건축물, 다가구 등)	· 서울(2)
· GB해제지역 허가기준	· 다가구, 연립등 층수 제한(3층), 동당 7세대이하, 옥탑물탱크 금지	· 경기(1)
· 주차장 기준	· 주차기준 강화, 10대 이하 기계식 불가 등	· 경기(1), 전북(1)
· 도시형생활주택기준	· 주차기준 강화, 타용도 출입구(계단등) 분리, 복도구조 등 제한	· 경기(1)
· 대전 그린빌딩 인정지침	· 인정기관 지정, 인정 및 심사 기준 운영	· 대전(1)
· 건축허가기준	· 6m미만 도로 건축선후퇴, 다락 불가 등 * 부적합시 건축심의 상정	· 서울(1)
· 대지 조경지침	· 조경기사 설계(조경면적 50㎡ 이상) 날인	· 부산(1)
· 허가신청도서 제출 기준	· 전자제출 도서이외 추가 출력본 제출 의무	· 부산(1)
· 하향식 피난구 설치 기준	· 대피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중 선택 사항을 하향식 피난구로 의무 적용	· 부산(1)
· 오피스텔 건축허가 지침	· 상업지역 오피스텔(7층이상) 등 허가전 디자인 구조 등 자문	· 부산(1)
· 건축심의기준	· 법정대수 이상 주차기준 요구 등 · 주차건축물, 고시원등 심의 대상 확대 등	· 서울(1), 인천(2)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56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본격화

▶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가 인하, 도시첨단 산업단지 중복지정 등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약 70%(총 115개 기관 중 81개)가 올해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등 혁신도시 사업이 가속화됨에 따라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도 본격적으로 시작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기업·대학·연구소가 집중되는 영역

현재 혁신도시의 전체용지 분양률이 79.2%('14.3월말 기준)인 점을 고려할 때 산·학·연 클러스터의 경우 낮은 수준의 분양률을 기록해왔다.(15%, '14.3월말 기준)

이에 국토부와 사업시행자(LH 등)는 지난 제5차 무역투자회의('14.3.12)에 포함된 혁신도시 활성화 내용*의 후속조치를 포함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다양한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분양가 인하, 입주허용기관 확대, 도시첨단산단 중복지정 등

우선, 초기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인근지역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던 4개 혁신도시의(경북, 광주·전남, 강원, 제주)분양가격을 인하하여 공급(4.30~)한다.

연구기관·대학·종합병원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설립 자금지원, 입주기업에 고용보조금 우선지원 및 입주기관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4.4.29 국회 본회의 통과예정)도 마련된다.

아울러, 산·학·연 클러스터를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하여 입주기업이 지방세감면 혜택(재산세 및 취득세 5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처의 산학융합사업(예 : 교육부의 산단캠퍼스 조성지원사업**)의 유치도 용이하도록 한다.

* 대구·충북·경북 3개 혁신도시가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을 신청하였고, 향후 최종 지정여부는 '14년 말 결정 될 예정

** 산단캠퍼스 조성지원사업: 산업단지에 대학을 일부 이전하여 현장적합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지원

산·학·연 클러스터 내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지원·산업진흥시설*의 입주만 허용했던 것을, 지역산업 간 집적으로 인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과 연계여부와 상관없이 입주 가능하도록 한다.

* 지역산업관련 각종 연구원·관리사무소·비영리재단 등

또한, 지구단위계획 상 허용용도로 명시되지 않았어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각 혁신도시마다 설치·운영, 위원장 시·도지사, 지역경제단체관계자·대학교수·연구원 등 20여명으로 구성

첨단·지식·정보통신 등 소규모 기업의 입주를 원활히 하기 위해 소규모 필지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기존필지를 분할하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공급 시 수의계약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가·지자체를 제외한 기타 실수요자는 추첨을 통한 용지공급이 원칙이었으나, 이전공공기관의 부설기관*의 경우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여 혁신도시 내 입주를 유도할 계획이다.

* 이전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한 기업·대학·연구소

이외에도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T/F」를 구성하고 각 부처의 산학협력사업을 발굴, 이를 혁신도시에 우선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은 혁신도시 내 다양한 기관이 입주하여 혁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은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와 더불어 혁신도시 내 다양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정책과
혁신도시개발과
(044)201-4482, 4488



세계 최초 비정형 거푸집으로 다양한 형태의 초고층 빌딩 짓는다

- ▶ 자재비용 20% 절감 및 공사기간 10% 단축
- ▶ 5월 국토교통기술대전에서도 선보일 예정

국토교통 R&D 전문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 중 하나인 초고층 빌딩 시공기술연구단에서 비정형 테이블폼을 개발, 현장적용을 마치고 기술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비정형 테이블폼은 최근 복잡해지고 있는 초고층 형태에 맞춰 거푸집의 모양 변형이 가능한 바닥 거푸집으로, 기존 사각 형태의 정형화된 거푸집으로는 배치할 수 없었던 곡선구간이나 불규칙한 형태의 공간까지 배치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그간 곡선구간 또는 불규칙한 공간을 메우기 위해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제작해야 하는 일회성 거푸집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어, 거푸집 제작을 위한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비정형 테이블폼을 50층 비정형 초고층 건축물 공사에 적용할 경우, 거푸집 자재비용 20% 이상 절감, 바닥 거푸집 공사기간도 10% 이상 단축할 수 있다.

개발된 기술은 2011년 12월 부산국제무역센터(지상 63층, 시공사 현대건설), 2012년 5월 시흥 6차 푸르지오 현장(지상 23층, 시공사 대우건설)에 시범 적용하여 기술력과 실용성을 검증받았으며, 5월에 개최되는 국토교통기술대전에서 일반 국민들에게도 선보일 예정이다.

국토진흥원 관계자는 “비정형 테이블폼 기술은 비정형 초고층빌딩 시공시 기존 공법보다 시공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핵심기술이다”라고 설명하며, 비정형 테이블폼 개발이 우리의 초고층빌딩 기술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일본 도로디자인 지침 요약 - 구상 단계부터 관리까지를 체계적으로 망라 -

- ▶ 자연 환경의 보전을 기본으로 함과 동시에, 도로의 주변 경관을 포함한 아름다움 추구
- ▶ 지역성 등에 응한 노력과 공리를 담당하는 기술자에 재촉
- ▶ 참고 자료로서 구조물 마다 도로 디자인을 실천한 사례를 섞어 해설

일본 국토 교통성에서 제정한 『도로 디자인 지침(안)』를 정리했다. 본 지침은 2003년 7월에 발표한 『아름다운 나라 만들기 정책 대강』에 대응한 것으로, 도로의 환경을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며, 종래의 메뉴얼적인 기술 지침과는 달라, 경관 정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상이나 설계의 단계를 포함해 체계적으로 경관 정비의 생각을 나타낸 도로 디자인의 지침은 7장으로 구성되며, 기본적인 생각을 해설한 『원론편』과 대표적인 시공 예를 나타낸 『사례편』, 실례를 기본으로 해 구체적으로 해설한 『실천편』도 동시에 작성되어 있다.

point 1 담당하는 기술자의 마음가짐 나타내 보인다.

지침은, 디자인의 기본적인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제1장의 『도로 디자인의 목적과 방향성』과 제2장의 『도로 디자인의 진행방식』에서는 구상으로부터 설계, 시공, 관리까지가 일관한 생각을 제시, 도로 구조물 뿐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포함해 디자인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디자인을 구체화하는데 시각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으로 일람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 특징이다.

디자인의 방향성에 관해서는 『지역에 친숙하고 소극적이며 세련된 도로 경관을 추구하고, 과잉인 디자인은 배제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디자인을 담당하는 기술자에 대해서는 폭넓은 교양과 견식이 필요하다고 지침은 말하고, 미술품을 감상하는 등, 평소부터 "분별력"을 기를 것을 요구했다. 게다가 지역 주민을 포함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받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point 2 자연이나 거리풍경과의 조화를 요구한다.

제3장의 『지역 특성에 의한 도로 디자인의 유의점』에서는 산간지역이나 전원 지대 등 여섯 가지 지역에 따른 디자인의 착안점을 각각 해설했다. 기본이 되는 것은 자연의 경관이나 거리풍경 등 주변 환경과의 조화다.

우회도로 계획의 경우 산간지역에서는 자연을 살려 법면 등을 최대한 억제하고 법면의 절취 부 비탈 단수는 최대한 5단 정도로 억제하며, 법면의 표면은 콘크리트로 가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고 있다. 게다가 도로의 선형을 변경하여 법면의 절취 면적을 억제하는 예도 나타내 보였다.

시가지에서는 도로 그 자체의 디자인 뿐만이 아니라, 길가의 건물이나 간판 등의 요소가 경관을 크게 좌우한다. 전주 등 도로 점유물의 형상이나 크기, 색채의 균형이 맞는 디자인으로 할 필요가 있다. 시가지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도로변의 이용 형태 변화에 따라 정비해 나가는 일도 추진할 수 있다.

point 3 가설 구조물의 영향도 검토

설계나 시공에서는 현장의 조건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나 시공 중의 가설 구조물에 의한 경관에의 영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5장의 『설계·시공의 디자인』에서는 토공이나 옹벽, 교량, 터널 등 구조물 마다 디자인의 요점을 해설하고 있다.

토공의 설계에서는 법면의 디자인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선형을 조정하여 법면의 면적을 억제하거나 기존의 수목 보존이나 표토의 활용을 검토하고 법면에는 『어스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조성 수법을 채용한다.

또한 교량은 가장 눈에 잘 띄는 시설이므로 아름답게 디자인함과 동시에 원칙적으로 주변 경관에 융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구조 형식에 따라 주변이 자연스럽게 영향을 억제할 수도 있다고 하고 있다.



맺는 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로건설은 성장과 경쟁의 논리에 밀려 효율성과 비용만 강조되어 왔다. 그러다보니 마을의 단절, 절취 비탈면의 과다, 인공구조물 설치 등 주변 경관과는 전혀 다른 삭막한 풍경만 남았고, 이는 운전자의 심리적 압박감, 보행자의 위험을 초래하여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했다.

이제는 주변경관과 어울림, 지역민과 운전자가 함께 즐거운 도로, 지역의 역사, 문화등 지역의 자원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도로 건설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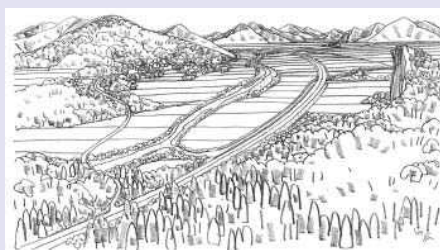
기준의 구성	
제1장 : 도로 디자인의 목적과 방향성	
제2장 : 도로 디자인의 진행방식	(도로 디자인의 순서, 도로 디자인의 표현 방법)
제3장 : 지역 특성에 의한 도로 디자인의 유의점	(산간지역에 있어서의 도로 디자인, 구릉·고원 지역에 있어서의 도로 디자인, 전원 지역에 있어서의 도로 디자인, 도시 근교 지역에 있어서의 도로 디자인, 시가지에 있어서의 도로 디자인, 도로 네트워크와 도로 디자인)
제4장 : 구상·계획시의 디자인(지도로 방부의 계획, 시가지의 도로 계획)	
제5장 : 설계·시공시의 디자인	(토공 설계, 교량·고가다리의 설계, 유니버설 디자인)
제6장 : 관리시의 디자인(관계자와의 협력 체제의 구축과 지원)	
제7장 : 도로 디자인의 시스템(일관성의 확보, 기술력의 활용과 향상)	

사례들

	<p>◀ 지형의 존중(아키타현 아키타시) 광역 농도 지형에 따른 업 다운은, 마치 자신이 경치에 용해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p>	
	<p>토지 이용과 조화(아키타현 오가치마치) ▶ 국도 13호 길가의 전답과 매우 잘 어울립니다. 먼 산들을 바라보면서 한가롭게 달립니다.</p>	
	<p>◀ 도시 생활의 매력 향상 (사이타마현 카와고에시) 중심 거리 대로변 창고의 마을, 지역의 역사적인 거리 풍경에 마음이 치유됩니다.</p>	
	<p>환경 영향·환경 부하의 저감(나가노현) ▶ 사람도, 자연도 함께 활기차게 공생할 수 있는 도로 나무들이 바람에 웅성거리는 속으로 달려 나갑니다.</p>	
	<p>◀ 모양의 안정과 세련(쿠마모토현) 한적한 어항을 가로질러 아름답게 건 설된 다리는, 곡선과 수직 단면의 아 름다움이 특징입니다</p>	
	<p>지역을 인식하는 장치로서의 쾌적함 ▶ (미야자키시 유료 도로) 남쪽지방인 미야자키만의 경치! 워싱턴 야자나무가 나란히 서는 이 풍경이 확실히 미야자키!</p>	



우회도로 계획전 이미지



효율성을 고려한 노선 계획(안)



지역경관 보전, 활용 노선 계획(안)

■ 자료 : 지방건설기술심의회 김 대 유
(주)덕성 부회장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과
- 입법예고일 : 2014. 4. 29.(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525호)
- 예고기간 : 2014. 4. 29. ~ 2014. 6. 9.

□ 개정이유

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임대주택 공급확대가 요구됨에도 시행자가 직접 건설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시행자의 부채증가 등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불투명하여, 민간자금을 활용한 임대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자 주택건설기금이 출자하는 리츠 등에 대해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택지개발지구내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수의 계약 대상에 ‘국가 등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신설(안 제13조의2제5항제1의2)

- 1) 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임대주택 공급확대가 요구됨에도 시행자가 직접 건설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시행자의 부채증가 등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불투명
- 2) 민간자금을 활용한 임대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자 주택건설기금이 출자하는 리츠 등에 대해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대상 확대

□ 의견제출

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과로 2014년 6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과
(전화 044-201-3438, fax 044-201-5661)

■ 자료 :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 입법예고일 : 2014. 4. 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407호)

□ 예고기간 : 2014. 4. 3. ~ 2014. 5. 13.

□ 개정이유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변경사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문구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변경사항을 산업단지면적 10% 이상 변경,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안 제10조)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677, 팩스 : 044-201-5564

■ 자료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 입법예고일 : 2014. 4. 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406호)
- 예고기간 : 2014. 4. 3. ~ 2014. 5. 13.
- 개정이유

산업단지내 용도지역 완화를 위해 복합용지를 도입하고,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상공회의소에 사업시행자 자격을 부여하며, 민간 사업시행자에게도 대항개발을 허용하는 한편, 재생사업 촉진을 위해 총괄사업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13.9.25)」의 일환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4.1.14.공포, 법률 제12253호)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가. 산업시설용지내에 복합용지 비율은 산업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50 까지 허용(안 제7조제4항)
- 나. 준산업단지 지정 기준 중 공장 수를 현행 5개에서 2개로 완화(안 제10조의3제1항)
- 다. 일정기간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토지소유자의 해제요청 시 산업단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 라. 중소기업협동조합·상공회의소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속 조합원(회원)에게 분양임대 등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안 제19조제1항)
- 마. 대항개발이 가능한 면적을 해당 산업단지 면적의 1/2 이내로 하고, 실시설계·부지조성 등 대항개발의 범위와 절차를 규정 (안 제20조)
- 바. 공공 사업시행자의 용지 미분양에 따른 위험을 해소하고 개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성원가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이윤율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0조)
- 사.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의 수의공급 계약 대상을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시·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도 가능하도록 확대(안 제42조의3제4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 규정(안 제6조의3)
- 나. 입주기업 종사자에 대한 산단내 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따르도록 규정(안 제27조의2)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677, 팩스 : 044-201-5564

■ 자료 : 국토교통부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 입법예고일 : 2014. 4. 25.(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566호)
- 예고기간 : 2014. 4. 25. ~ 2014. 5. 15.

□ 개정이유

2013년 개정된 영구임대주택의 법정영세민에게 적용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주거비 상승 요인을 반영하고, 행정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영세민에 대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 매년 별도 고시함

□ 주요내용

가. 법정영세민에 대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인상

- 2014년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법정영세민에 적용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주거비 상승요인을 반영
 - * 2013년도 주거비물가지수 3.2% 반영

나. 법정영세민에 대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별도 고시

- 급지별 고정단가를 적용하고 있는 법정영세민에 대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대하여는 주거비물가지수를 반영하여 매년 3월 1일 별도 고시

□ 의견제출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4년 5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61, Fax 044-201-5531

■ 자료 : 국토교통부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폐기물이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해야 하는 공사에 있어 건설공사와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용역을 발주하지 아니한 경우, 최초로 해당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는 해당 공사현장에서 바로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 회 답

최초로 해당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는 해당 공사현장에서 바로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 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이라 함) 제2조제9호에서는 “배출자”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이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의 배출자는 발주자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호에 따르면 “발주자”란 건설공사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그 건설공사를 직접 하는 자를 포함함)를 말하며,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르면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는바, 건폐법 제16조에 따르면 배출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의 배출자는 같은 법 제2조제9호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자도 발주자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건폐법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위탁 처리하는 건설폐기물과 현장에서 스스로 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을 구분하거나 건설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배출자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발생은 “건설공사”로 인한 것이지 “도급”이나 그 밖의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발주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재활용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건폐법 제15조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전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라 발주자가 배출자가 되고, 발주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도 그 처리 방법(직접 처리 또는 위탁 여부)을 결정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충격차단공과 철근-숏크리트를 이용한 근접병설터널의 암반 필라부 시공법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하이콘엔지니어링
-------	-------------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29호
- 기술분류 : 토목/터널/터널 구조물 설치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충격차단공(슬롯 드릴링, 라인 드릴링)을 이용한 진동제어발파기술과 철근-숏크리트를 이용하여 필라부에 대해 보강기술을 사용하여, 암반 터널 입·출구에서 터널간 이격거리를 좁히고 터널내에서 넓혀가면서 굴진하여 선·후행 터널별로 차등적인 굴착 및 보강방법을 적용하는 암반 근접병설(병렬)터널의 시공법이다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충격차단공(슬롯 드릴링, 라인 드릴링)을 이용한 진동제어발파기술과 철근-숏크리트를 이용하여 필라부에 대해 보강기술을 사용하여, 암반 터널 입·출구에서 터널간 이격거리를 좁히고 터널내에서 넓혀가면서 굴진하는 암반 근접병설터널 시공법

신축 붐이 장착된 원치와 SLW 크레아 수지를 이용한 노후 상수도관 갱생공법(S.L.W 공법)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성림산업(주)
-------	---------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31호
- 기술분류 : 토목/상하수도/상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보수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노후 상수도관 갱생시 신축붐이 장착된 원치로 고압살수 스크레퍼-플랜저-스펀지-CCTV로 구성된 부속품을 동시에 견인하여 크리닝 한 후, 속경화성 SLW크레아 수지를 스프레이 노즐로 분사하여 경화시키는 비굴착 관로 전체 갱생 공법이다.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Ø80mm~Ø1200mm의 노후 상수도관 갱생시 신축붐이 장착된 원치로 고압살수 스크레퍼-플랜저-스펀지-CCTV로 구성된 부속품을 동시에 견인하여 크리닝 한 후, SLW크레아 수지를 스프레이 노즐로 분사하여 경화시키는 비굴착 관로 전체 갱생 공법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https://www.kaia.re.kr/>)건설신기술정보마당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심의 현황

2014년 제5회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결과

- 건 명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안) 등 8건
- 심의일자 : 2014. 4. 23.(수)

의안 번호	안 건 명	발주청	심의결과
2014-05-01	양산시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양산시 (산림공원과)	조건부
2014-05-02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진주시 (하천관리과)	조건부
2014-05-03	김해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김해시 (수도과)	조건부
2014-05-04	진주시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진주시 (정수과)	조건부
2014-05-05	정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	통영시 (치수방재과)	조건부
2014-05-06	사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	거제시 (상하수도과)	조건부
2014-05-07	진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의 2개소 통합전면 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SOQ)	진주시 (하수과)	조건부 (PQ)
2014-05-08	사천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SOQ)	사천시 (전략사업담당관)	조건부 (PQ+SOQ)

2014년 제6회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계획

- 건 명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안) 3건
- 심의일자 : 2014. 5. 9.(금)

의안 번호	안 건 명	발주청
2014-06-01	고현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남해군 (건설교통과)
2014-06-02	대장경 기록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합천군 (대장경테마파크 관리사업소)
2014-06-03	합천군 상수도 관망도 작성 및 누수탐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합천군 (상하수도사업소)

2014년 제7회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계획

- 건 명 : 실시설계 적정성1건,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안) 4건
- 심의일자 : 2014. 5. 21.(수)

의안 번호	요청사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발주청
2014-07-01	실시설계 (적정성)	사천 종포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사천시 용현면 신촌리 432-24 일원 · 사업내용 : A=377,160㎡ · 사 업 비 : 630억원(공사비 324, 기타 306) · 사업기간 : 2014 ~ 2016년	사천시 (도시과)

의안 번호	안 건 명	발주청
2014-07-02	거창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거창군 (도시건축과)
2014-07-03	합천군 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합천군 (도시건축디자인과)
2014-07-04	진주시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진주시 (녹지공원과)
2014-07-05	창원시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창원시 (정보통신담당관)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를담당
(055)211-4625

계약심사 현황

(단위:백만원)

기 간	분 야	건수	심사현황			비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2014년 4월	계	91	80,753	76,150	4,602	5.70%	
	공사	토목	30	51,743	48,595	3,148	6.08%
		건축	6	10,378	9,776	602	5.80%
		기타	14	7,360	6,946	414	5.63%
	용역	12	8,617	8,264	353	4.10%	
물품	29	2,655	2,569	86	3.23%		

■ 자료 : 도 회계과 계약심사담당
(055)211-3548

2014년 국가기술자자격 검정시행일정

회별	회별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결정 (방문 제출)	실기(면접) 시험	합격자 발표
		인 터 넷			·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 (인 터 넷)		
기술사	제103회	4.4~4.10	5.11	6.27	6.30~7.3	7.26~8.8	8.22
	제104회	6.27~7.3	8.3	9.19	9.22~9.25	10.18~10.30	11.14
기사 (산업기사)	제2회	4.18~4.24	5.25	6.5	6.9~6.12	7.5~7.18	8.22
	제3회	7.25~7.31	8.17	8.29	9.1~9.4	10.4~10.17	11.14
	제4회	8.22~8.28	9.20	10.2	10.6~10.10 (10.9 제외)	11.1~11.14	12.12

■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4년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순회교육」 안내

- 교육대상
 -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직원 및 공사관계자
 - (공공기관) 한국도로공사, LH,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공사관련 소속직원 및 공사관계자
 - (지자체, 해양수산부) 토석 1,000m³ 이상 발생 현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항만청 등의 공사관련 소속 직원 및 공사관계자
- 교육내용 :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소개, 제도안내, 시스템 시연 및 사용법 설명
- 교육일정 : 4월 28일 ~ 5월 28일 지역별 순회교육
(건설지원과-3016호(2014. 4. 11.) 참조)

■ 자료 : 국토교통부 투자심사담당관
(044)201-3282

위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www.gsnd.net>(실국홈페이지) 및
경상남도 건설정보 <http://gnci.gsnd.net>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재 순청 건설관련 자료 및 원고도 받습니다.

TEL : (055)211-4623~6

FAX : (055)211-4619

e-mail : babyhye@korea.kr

이 자료는 업무 참고용입니다.